

제139호(2016. 12. 30.)

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김동원 박혜진



1. 조사 개요	1
2.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2
3. 농업·농촌에 대한 현안 인식과 정책 수요	7
4. 농업인 의식과 농업경영 여건 변화	14
5. 요약 및 시사점	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061-820-2236	hskim@krei.re.kr
내용 문의	김동원 연구위원	061-820-2227	dongweon@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는 높게 평가, 투자와 세금 추가부담 찬성 비율은 ‘정체’**
 - 도시민 10명 중 8명은 농업·농촌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이라는 데 동의하였고,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54.9%)이 동의함.
 -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확대’에 농업인 73.6%, 도시민 49.7% 찬성, 반대는 5% 내외
 - 도시민 과반수 이상(59.3%)이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찬성한 반면 반대는 9.3%에 그침. 다만, 본인이 세금 추가 부담에 직접 참여할 의향은 35.1%로 상대적으로 낮음.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는 도시민은 62.1%, 다원적 가치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에 찬성하는 비율은 54.6%로 전년보다 각 8.4%p, 4.9%p 감소함.
- **쌀 소비촉진 대책 마련 요구, ‘청탁금지법’ 개정과 ‘대기업 농업 진출’에는 도-농 시각차**
 - 식량자급률을 현재보다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농업인 68.4%, 도시민 51.3%)를 넘었고, 농지 보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동의함.
 - 쌀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선호 소비촉진 정책과 생산량 감축 등 제시
 - 대기업 농업분야 진출 농업인 68.8%, 도시민 52.7%가 반대(찬성은 각 14.4%, 29.0%)
 -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농업인 52.8%, 도시민 37.7%가 공감
- **중장기 정책 ‘농가 소득안정’과 ‘후계인력 육성’ 꼽아, 국산농산물 구매 충성도는 상승**
 - 올해 가장 관심이 많았던 농식품 분야 현안은 농산물 가격과 쌀값 하락 등을 꼽음.
 - 중장기 역점추진 농업정책으로 농가 소득안정, 후계농업인 육성, 유통구조 개선을 주문
 - 도시민 과반수(52.6%)는 국내 농산물 안전성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했으며, 수입산과 비교해 국산이 안전하다고 인식(긍정 66.9%, 부정 2.8%)하고 있으나 차이는 줄고 있음.
 - 국내산이 수입산보다 비싸도 우리 농산물을 사겠다는 응답이 32.8%로 전년보다 11.8%p 상승한 반면, 수입농산물에 거부감이 없다는 응답도 전년보다 5.3%p 증가한 43.9%를 차지
- **영농활동 기대연령 74.8세…대부분 후계인력 ‘없다’, 농가 84.5% 일손부족 어려움 느껴**
 -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일손 부족>생산비 증가>개방 확대>판로 확보를 꼽음.
 - 영농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견은 10년 전 27.4%에 비해 크게 증가한 40.8%를 기록
 - 영농활동 기대 연령 평균 74.8세로 인식, 이 중 후계인력이 없다는 농가 77.4% 달해
 - 영농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조직으로 농촌진흥기관>조합 및 품목조합>농자재상>농민·품목 단체를 꼽았으며, 올해 추진된 농협법 개정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함.
 - 농가 대부분(84.5%)이 최근 1년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 해소 방안으로는 기계화 촉진>공공근로 투입>취업 알선>외국인 인력활용 제도 개선 등을 제시

도시민 1,500명, 농업인 1,090명 조사에 참여

1. 조사 개요

1.1. 조사 배경과 설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의식 변화와 정책현안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여 연구에 활용할 목적으로 매년 말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원한 1978년부터 시작해 1999년까지는 비정기 조사로 시행되어 정책수립 등에 활용되었음.
 - 2000년부터 현재까지는 매년 정례 조사로 실시되어 정식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도시민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로 발전하였음.

1.2. 조사 방법 및 내용

- 조사는 2016년 10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1,090명 등 총 2,59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¹⁾

구분	농업인	도시민
조사 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전국 도시지역(洞部)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 지역	전국(제주 포함)	전국(제주 포함)
표본 크기	1,090명(대상: 3,000명)	1,500명
조사 방법	우편조사	가구 방문 면접조사
표본 추출 방법	전국 읍·면 독농가	지역/성/연령별 할당표본추출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고정표본 사용	±2.5%p
조사 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 조사 주요 내용은 농업인과 도시민의 의식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정 문항과 정책현안 등을 포함한 비고정 문항으로 구성함.
 - 농업인은 경영과 관련된 의식 및 농촌생활 의식 변화를 중심으로, 도시민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인식과 정책수요를 중심으로 조사함. 공통적으로는 농업의 사회적 역할인식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 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파악함.
 - 이 자료에서는 조사 내용 가운데 주요 의식변화와 정책현안 등 일부 결과만을 정리함.

1) 농업인은 연구조사 목적에 부합하고 과거 조사연계 등을 고려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도시민은 조사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일반적인 사회조사 표본 추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2.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2.1. 농업·농촌의 가치와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의식 변화

□ 도시민 79.3% ‘농업·농촌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

- 도시민에게 농업·농촌의 사회적 역할과 성장 가능성, 발전 정도 등 6개 항목에 대한 평소 생각을 질문한 결과, 대부분 항목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은 10% 내외로 나타남.
- ‘농업·농촌은 과거 우리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이라는 데 79.3%가, ‘농업·농촌은 현재 우리생활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견에도 65.9%가 동의함. 이 밖에도 ‘농업·농촌은 미래성장 동력’(54.9%), ‘농업·농촌은 소중한 살아볼 만한 곳’(52.9%) 등의 의견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함. 다만, 농업과 농촌이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의견에는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13% 내외로 조사됨.
 - 농업·농촌에 대한 생각을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농업·농촌은 소중한 살아볼 만한 곳’에 ‘그렇다’(52.9%)는 응답은 작년(68.4%)에 비해 15.5%p 하락하여 큰 폭으로 감소

표 1.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변화

단위: %

구분	사례수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①+②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④+⑤	평균 (점)
농업·농촌은 과거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	1,500	22.5	56.8	79.3	17.4	3.1	0.2	3.3	4.0
농업·농촌은 현재 우리 생활 전반에 중요한 역할 담당	1,500	14.8	51.1	65.9	28.1	5.7	0.3	5.9	3.7
농업·농촌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가능성	1,500	9.6	45.3	54.9	36.3	8.1	0.7	8.7	3.6
우리나라 농업은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음	1,500	6.3	44.3	50.6	36.2	11.5	1.7	13.2	3.4
우리나라 농촌은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음	1,500	5.2	43.1	48.3	38.1	12.1	1.4	13.5	3.4
농업·농촌은 소중한 살아볼 만한 곳	1,500	6.0	46.9	52.9	39.6	7.0	0.5	7.5	3.5

□ 도시민 10명 중 6명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인정

- 농업·농촌의 사회·문화적 다원적 기능 또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도시민 10명 중 6명은 ‘가치가 많다’(62.1%)고 응답하였으며, ‘없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함.
- 인구특성별로 보면, 광주/전라, 서울 지역 거주자, 농촌에 가족이 있는 계층에서 긍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작년과 대비해서는 다원적 기능 또는 공익적 가치가 ‘많다’는 의견이 8.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농업·농촌의 사회·문화적 다원적 기능 인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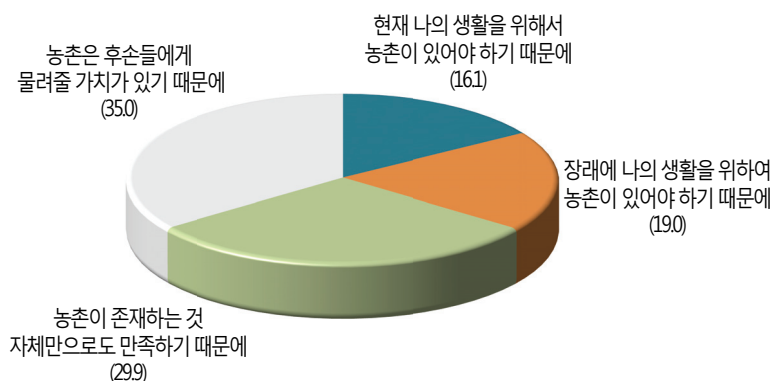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① 매우 많다	② 많은 편	①+②	③ 보통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④+⑤	평균 (점)
전체		1,500	7.0	55.1	62.1	31.3	6.5	0.2	6.7	3.6
지역별	서울	367	6.0	61.3	67.3	28.6	4.1	0.0	4.1	3.7
	인천/경기	471	7.4	52.7	60.1	33.5	6.2	0.2	6.4	3.6
	부산/경남/울산	235	6.4	50.6	57.0	37.9	4.7	0.4	5.1	3.6
	대구/경북	134	4.5	59.0	63.4	33.6	3.0	0.0	3.0	3.6
	광주/전라	125	9.6	59.2	68.8	17.6	13.6	0.0	13.6	3.6
	대전/충청	120	10.0	54.2	64.2	23.3	11.7	0.8	12.5	3.6
	제주/강원	48	6.3	33.3	39.6	45.8	14.6	0.0	14.6	3.3
농촌인 가족 여부	있다	446	7.6	57.2	64.8	27.8	7.0	0.4	7.4	3.6
	없다	1,054	6.7	54.2	60.9	32.7	6.3	0.1	6.4	3.6

- 농업·농촌이 사회·문화적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응답자(n=931)는 그 이유를, ‘농촌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치가 있기 때문에’(35.0%), ‘농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에’(29.9%) 순으로 응답함.
- 다음으로 ‘장래에 나의 생활을 위하여 농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19.0%), ‘현재 나의 생활을 위해서 농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16.1%) 순으로 조사됨.

그림 1.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가치 인식

단위: %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지보전 필요성 공감도 높아

2.2.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지보전에 대한 인식

□ 국민 과반수 이상 “식량자급률 높여야”...과거보다 비율은 낮아져

- 식량자급률에 대한 평소 생각을 물어본 결과,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식량자급률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각 68.4%, 51.3%)으로 나타났으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6% 수준이었음.
- 도시민의 경우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51.3%)는 응답과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42.7%)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농업인은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68.4%)는 응답이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23.9%)는 응답의 3배 가까이 많았음.
-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 비중을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도시민은 7.1%p, 농업인은 5.4%p 감소했으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소폭 증가함.

표 3. 식량자급률 감소세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사례수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식량자급률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	현재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면 된다	외국에서 값싼 식량을 쉽게 수입할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무응답
농업인	1,090	68.4	23.9	6.2	1.4
도시민	1,500	51.3	42.7	6.1	0.0

□ 국민 10명 중 7명은 식량안보 등 이유로 “농지 보전해야”

- 농지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도시민 10명 중 7명이 ‘필요하다’(각 71.5%, 73.3%)고 응답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농업인이 12.4%, 도시민이 3.0%로 나타나 보전 필요성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음.
- 농지를 보전해야 할 이유로 농업인은 ‘식량안보’(61.1%), ‘미래세대 자산’(21.7%)을 중요하게 꼽은 반면, 도시민은 이 같은 이유 외에도 환경보전과 효율적인 국토이용 등 다양한 이유를 꼽고 있어 도-농 간 농지 보전 목적에 차이를 보였음.

도시민 과반수 농업·농촌 투자 확대와 세금 부담에 긍정적

표 4. 농지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사례수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①+②	③ 보통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④+⑤	모름/ 무응답
농업인	1,090	28.6	42.8	71.5	14.0	10.0	2.4	12.4	2.1
도시민	1,500	15.9	57.4	73.3	23.7	2.9	0.1	3.0	0.0

2.3.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인식과 참여 의향

□ 농업인 73.6%, 도시민 49.7% ‘농업·농촌에 투자 늘려야’

-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인식은 도시민과 농업인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인의 경우 10명 중 7명이 ‘투자를 늘려야 한다’(73.6%)고 응답한 반면 도시민은 절반(49.7%)만이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농업인이 13.9%인 반면, 도시민은 37.2%로 높았음.
- 지난해와 비교하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다만,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농업인이 소폭 증가한 반면 도시민은 감소함.

표 5.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인식

단위: %

구분	사례수	투자를 늘려야 한다	투자를 줄여야 한다	현 수준 유지	잘 모르겠다	무응답
농업인	1,090	73.6	5.6	13.9	5.9	1.1
도시민	1,500	49.7	6.7	37.2	6.5	0.0

□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 유지 위해 세금 추가부담 54.6%가 ‘찬성’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도시민 과반 이상(54.6%)이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38.8%로 집계됨.
- 인구특성별로는 세금 추가부담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중이 농촌에 가족이 있는 경우(62.1%)가 농촌에 가족이 없는 경우(51.4%)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비용 부담에 찬성하는 비율은 지난해보다 4.9%p 감소, 5년 전보다는 9.6%p 증가함.



표 6.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① 적극 찬성한다	② 찬성하는 편이다	①+②	③ 반대하는 편이다	④ 적극 반대한다	③+④	잘 모르겠다	평균 (점)
전체		1,500	1.4	53.2	54.6	32.2	6.6	38.8	6.6	2.5
농촌인 가족 여부	있다	446	1.8	60.3	62.1	27.1	5.6	32.7	5.2	2.6
	없다	1,054	1.2	50.2	51.4	34.3	7.0	41.4	7.2	2.5

□ 도시민 10명 중 6명이 ‘농촌 복지 예산 증액’에 찬성

- 농촌복지와 관련한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도시민 10명 중 6명이 예산을 늘리는 것에 ‘찬성한다’(59.3%)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9.3%에 그침.
 - 인구특성별로는 농촌 거주 경험이 있고, 농촌에 가족이 있는 경우 예산 증대에 ‘찬성한 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 복지예산 증액에 찬성하는 비율은 지난해보다 2.6%p 감소, 5년 전보다는 3.2%p 증가함.

표 7.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견해

단위: %

구분		사례수	① 적극 찬성한다	② 찬성하는 편이다	①+②	③ 보통 이다	④ 반대하는 편이다	⑤ 적극 반대한다	④+⑤	평균 (점)
전체		1,500	4.8	54.5	59.3	31.4	8.7	0.5	9.3	3.5
지역별	서울	367	1.9	55.6	57.5	33.2	9.3	0.0	9.3	3.5
	인천/경기	471	6.6	64.8	71.3	21.9	6.4	0.4	6.8	3.7
	부산/경남/울산	235	6.4	42.6	48.9	43.0	7.7	0.4	8.1	3.5
	대구/경북	134	3.0	42.5	45.5	39.6	14.2	0.7	14.9	3.3
	광주/전라	125	3.2	63.2	66.4	24.8	8.8	0.0	8.8	3.6
	대전/충청	120	6.7	44.2	50.8	37.5	10.8	0.8	11.7	3.5
	제주/강원	48	6.3	41.7	47.9	33.3	12.5	6.3	18.8	3.3
농촌 거주경험	있다	717	6.0	59.0	65.0	26.2	7.9	0.8	8.8	3.6
	없다	783	3.7	50.4	54.2	36.1	9.5	0.3	9.7	3.5
농촌인 가족 여부	있다	446	8.1	60.1	68.2	24.2	6.7	0.9	7.6	3.7
	없다	1,054	3.4	52.2	55.6	34.4	9.6	0.4	10.0	3.5

3. 농업·농촌에 대한 현안 인식과 정책 수요

3.1. 쌀값 하락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 쌀 재고 문제 해결 위해 ‘소비자 맞춤형 소비촉진 정책’ 필요

- 쌀 재고 증가에 따른 산지가격 하락 등 쌀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 도시민은 ‘소비자 선호 맞춤형 쌀 소비 촉진 정책’(38.2%)과 ‘생산량 감축’(22.5%)으로 의견이 집중된 반면, 농업인은 다양한 의견으로 분산됨.
 - 농업인은 소비 촉진 정책(17.7%), 생산량 감축(17.4%), 사료용 등 확대(17.0%), 대외원조(16.4%), 수출(14.4%) 등의 의견을 제시함.

표 8. 쌀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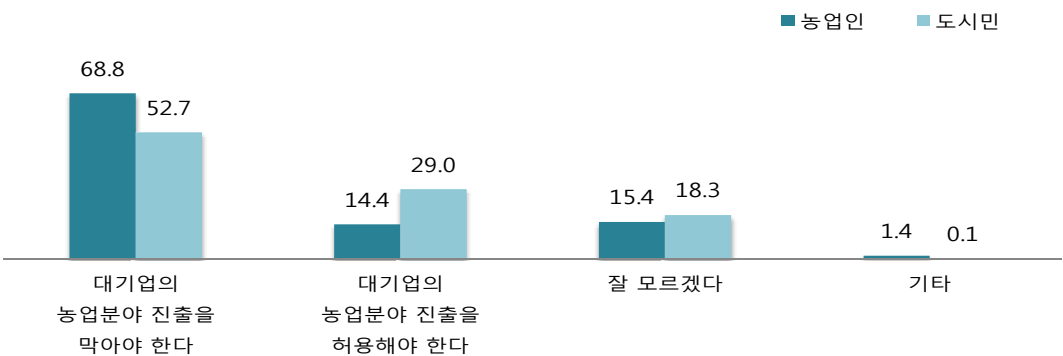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생산량 감축 정책 (쌀 생산 조정제 등)	대외 원조 등 소진 정책	소비자 선호 맞춤형 쌀 소비 촉진 정책	농업진흥지역 추가 해제 등 농지면적 감축	사료 및 가공용 쌀 방출 확대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고급미 수출 정책	무응답
농업인	1,090	17.4	16.4	17.7	15.9	17.0	14.4	1.2
도시민	1,500	22.5	8.5	38.2	6.7	7.3	16.8	0.0

□ 대기업의 농업 진출 과반수 이상 반대, 찬성률은 도시민이 농업인보다 높아

-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에 대해서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진출을 막아야 한다’(각 68.8%, 52.7%)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도시민(29.0%)이 농업인(14.4%)에 비해 2배 정도 많아 시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응답도 농업인(15.4%)보다 도시민(18.3%)이 상대적으로 많음.

그림 2.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에 대한 견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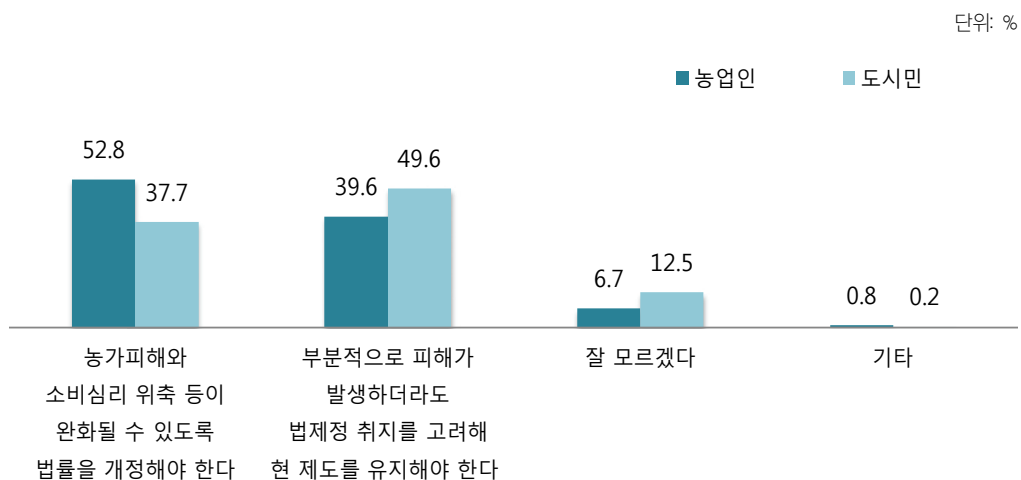


올해 ‘농산물 가격’, ‘쌀값 하락’에 가장 관심 많아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농업인은 찬성이, 도시민은 반대가 더 많아

- 2016년 9월 28일자로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개정 여론과 관련해, 농업인의 경우 ‘농가피해와 소비심리 위축 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52.8%) 이상으로 나타남.
- 반면, 도시민은 ‘부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49.6%)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김영란법’을 바라보는 농업인과 도시민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여론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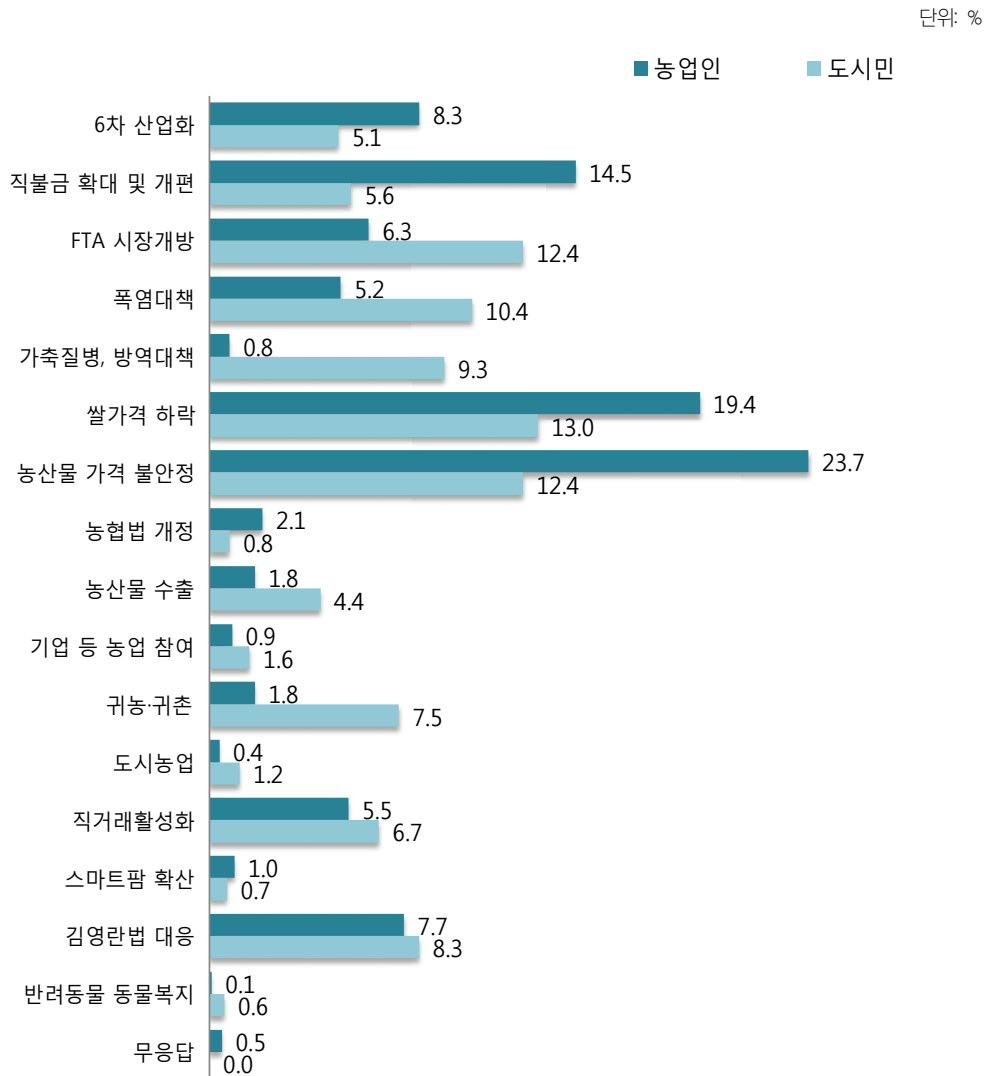


3.2. 농업 관련 관심정책, 중장기 농업정책 수요

□ 농식품 분야 현안 ‘농산물 가격 불안정’, ‘쌀값 하락’에 가장 큰 관심

- 올해 가장 관심이 많았던 농식품 분야 현안으로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불안정’(23.7%)을 꼽은 반면, 도시민은 ‘쌀가격 하락’(13.0%)이라고 응답함.
- 이어 농업인은 ‘쌀가격 하락’(19.4%), ‘직불금 확대 및 개편’(14.5%), ‘6차 산업화’(8.3%) 등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도시민은 ‘FTA 시장개방’(12.4%), ‘농산물 가격 불안정’(12.4%), ‘폭염대책’(10.4%) 등의 순으로 응답해 차이를 보임.

그림 4. 올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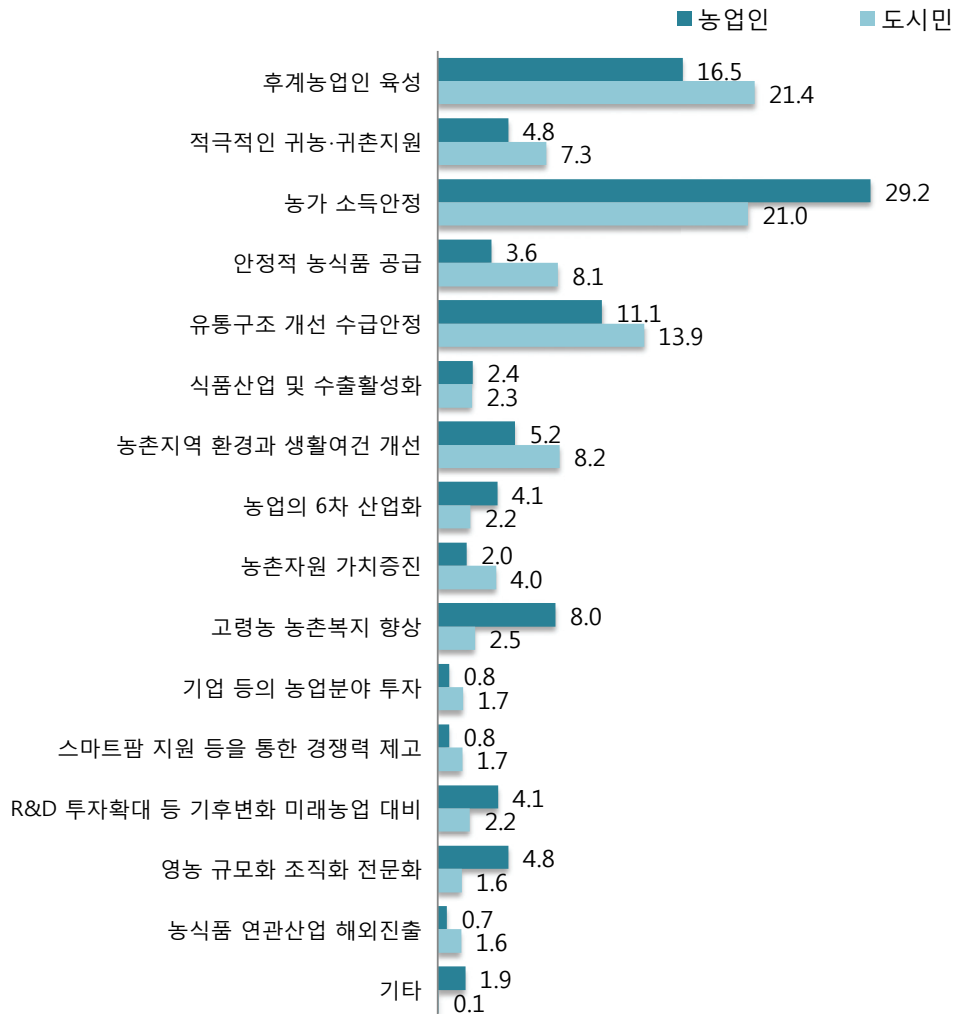
□ 중장기 중점 정책으로 '농가소득 안정', '후계농업인 육성' 꼽아

- 중장기 농업·농촌의 유지 발전을 위해 향후 중점을 뒀야 할 정책으로 농업인은 '농가 소득안정'(29.2%)을, 도시민은 '후계 농업인 육성'(21.4%)을 가장 많이 꼽아 견해 차이를 보임.
- 농업인은 이와 함께 '후계농업인 육성'(16.5%), '유통구조 개선'(11.1%), '고령농 농촌 복지(8.0%) 등을, 도시민은 '농가 소득안정'(21.0%), '유통구조 개선'(13.9%), '농촌 지역 생활여건 개선'(8.2%) 등을 꼽음.

도시민, ‘우리 농식품 안전성 개선’ 긍정 평가

그림 5. 중장기 농업·농촌의 유지 발전을 위해 중점을 뒀야 할 정책

단위: %



3.3. 소비자로서의 우리 농식품에 대한 인식

□ 도시민 과반수 ‘우리 농식품 안전성 개선되고 있다’

- 최근 5년간 농식품 안전성 개선 정도에 대해 도시민 52.6%는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11.4%에 그쳐 개선되고 있다는 인식이 뚜렷함.
- 인구특성별로 보면,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은 자영업 종사자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화이트칼라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음.

표 9. 최근 5년간 농식품 안전성 개선 정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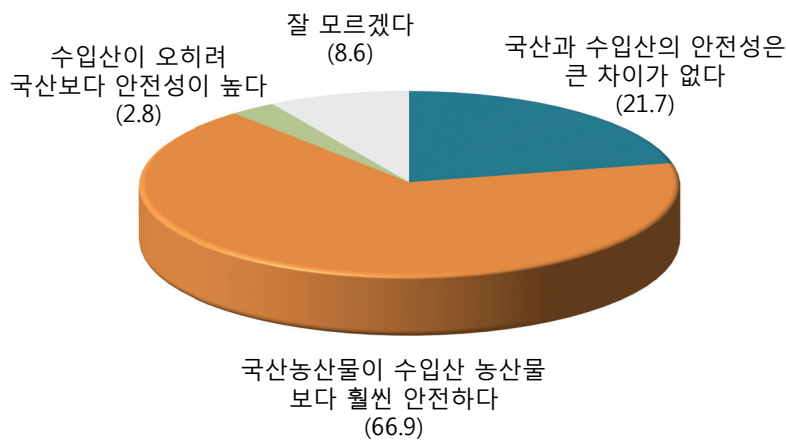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① 매우 개선되고 있다	② 개선되고 있는 편	①+②	③ 보통	④ 개선되고 있지 않은 편	⑤ 전혀 개선되고 있지않다	④+⑤	평균 (점)
전체	1,500	1.6	51.0	52.6	36.0	10.2	1.2	11.4	3.4
직업별	농/임/어업	4	0.0	0.0	50.0	0.0	50.0	50.0	2.0
	화이트칼라	302	1.7	45.4	47.0	39.4	12.3	13.6	3.3
	블루칼라	441	1.6	48.8	50.3	36.7	12.0	12.9	3.4
	자영업	316	2.2	61.7	63.9	26.6	8.2	9.5	3.6
	주부	277	1.4	53.4	54.9	37.5	6.9	7.6	3.5
	학생	113	0.0	44.2	44.2	45.1	9.7	10.6	3.3
	기타/무직	47	2.1	42.6	44.7	38.3	14.9	17.0	3.3

- 수입산과 비교한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도시민 66.9%가 ‘국산 농산물이 수입산 농산물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응답하였고, ‘국산과 수입산의 안전성은 큰 차이가 없다’는 응답은 21.7%로 나타남. ‘수입산이 오히려 국산보다 안전하다’는 응답은 2.8%에 그침.
 - 지난 2010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국산과 수입산에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12.4%p 증가해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도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 안전성 비교

단위: %



□ 도시민 87.7%는 ‘농산물 시장 지나치게 개방되었다’고 인식

-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 개방 정도에 대해 도시민 10명 중 9명 정도가 ‘농산물 시장은 지나치게 개방’(87.7%)되었고, ‘농산물 시장이 더 개방되면 농가와 농촌경제가 더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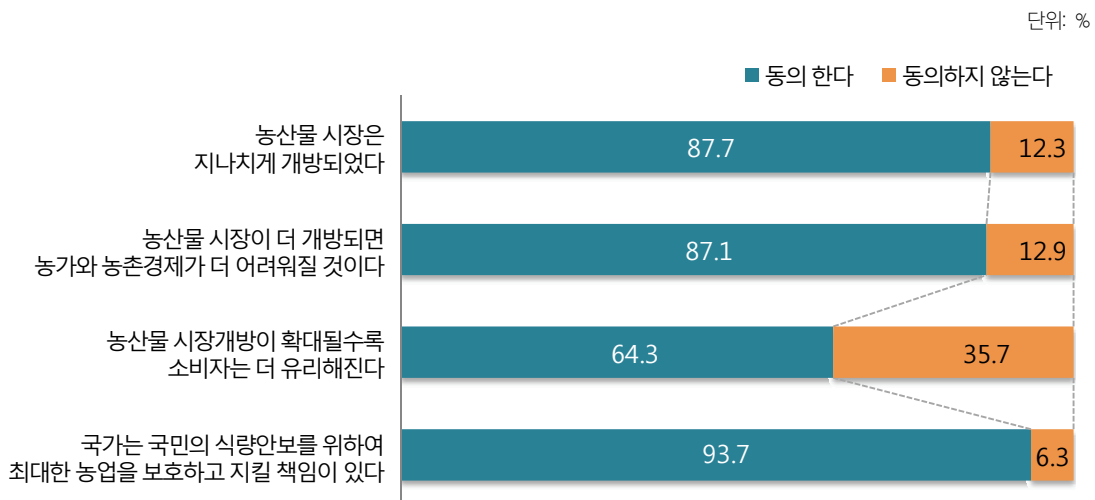


‘농산물 시장 지나치게 개방되었다’ 인식 비율 증가

려워질 것’(87.1%)이며, ‘국가는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최대한 농업을 보호하고 지킬 책임이 있다’(93.7%)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도시민 10명 중 6명(64.3%)은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될수록 소비자는 더 유리해 진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7%로 집계됨.
 - 지난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개방되었다’는 비율이 2014년(75.7%)에 비해 12.0%p 증가함. 개방이 확대될수록 소비자가 더 유리하다는 응답은 2014년에 비해 약간 (2.9%p) 감소함.

그림 7.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인식



□ 도시민 “농산물 구입 시 품질 우선하겠다”...‘무조건 국산 농산물 구입’ 32.8%

- 농산물이 현재보다 더 개방된다면 농산물 구입을 어떻게 할지 질문한 결과, ‘품질 우수성을 고려해 구입’한다는 의견이 38.5%로 가장 많았고,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 구입’(32.8%), ‘수입산에 비해 우리 농산물 가격이 비싸면 수입 농산물 구입’(28.7%)의 순으로 나타남.
 - 인구특성별로 살펴보면, ‘품질 우수성을 고려해 구입한다’는 응답은 20대, 대재 이상, 농촌 거주 경험에 없는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 구입’(32.8%)한다는 응답은 11.8%p 증가했으며,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면 수입 농산물을 구입’(28.7%)한다는 응답은 10.6%p 감소함.

도시민 10명 중 4명 “수입 농산물 거부감 없다”

표 10.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산물 구입 의향

단위: %

구분		사례수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 구입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면 수입 농산물 구입	품질 우수성을 고려해 구입
전체		1,500	32.8	28.7	38.5
연령별	19~29세	276	21.7	32.6	45.7
	30대	281	33.1	29.5	37.4
	40대	327	33.6	28.7	37.6
	50대	296	36.5	27.4	36.1
	60세 이상	320	37.8	25.6	36.6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71	42.7	30.4	26.9
	고졸	636	34.3	25.9	39.8
	대재 이상	693	29.0	30.7	40.3
농촌 거주경험	있다	717	38.4	25.1	36.5
	없다	783	27.7	31.9	40.4

□ ‘수입 농산물 거부감 없다’ 50%에 육박

- 도시민에게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3.9%는 ‘별다른 거부감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이어서 ‘수입 농산물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구매하지 않는다’(26.8%), ‘수입 농산물에 대해 인식은 좋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해 구매한 다’(1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인구특성별로는 고연령, 저학력일수록 수입 농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젊고 고학력 층에서 수입 농산물에 대한 거부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수입 농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응답이 5.3%p 증가

표 11.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사례수	수입 농산물이 좋지만 가격이 비싸 자주 구매하지 못한다	수입 농산물이 좋고 구매도 거리낌이 없다	별다른 거부감이 없다	수입 농산물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구매하지 않는다	수입 농산물에 대해 인식은 좋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해 구매한다
전체		1,500	1.9	7.7	43.9	26.8	19.7
연령별	19~29세	276	2.2	10.9	57.2	17.8	12.0
	30대	281	0.7	6.8	45.9	27.8	18.9
	40대	327	3.4	5.5	45.0	26.6	19.6
	50대	296	2.4	8.4	34.8	31.8	22.6
	60세 이상	320	0.9	7.5	37.8	29.4	24.4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71	1.2	5.3	28.7	43.3	21.6
	고졸	636	2.4	6.9	43.9	25.3	21.5
	대재 이상	693	1.7	9.1	47.6	24.1	17.5



4. 농업인 의식과 농업경영 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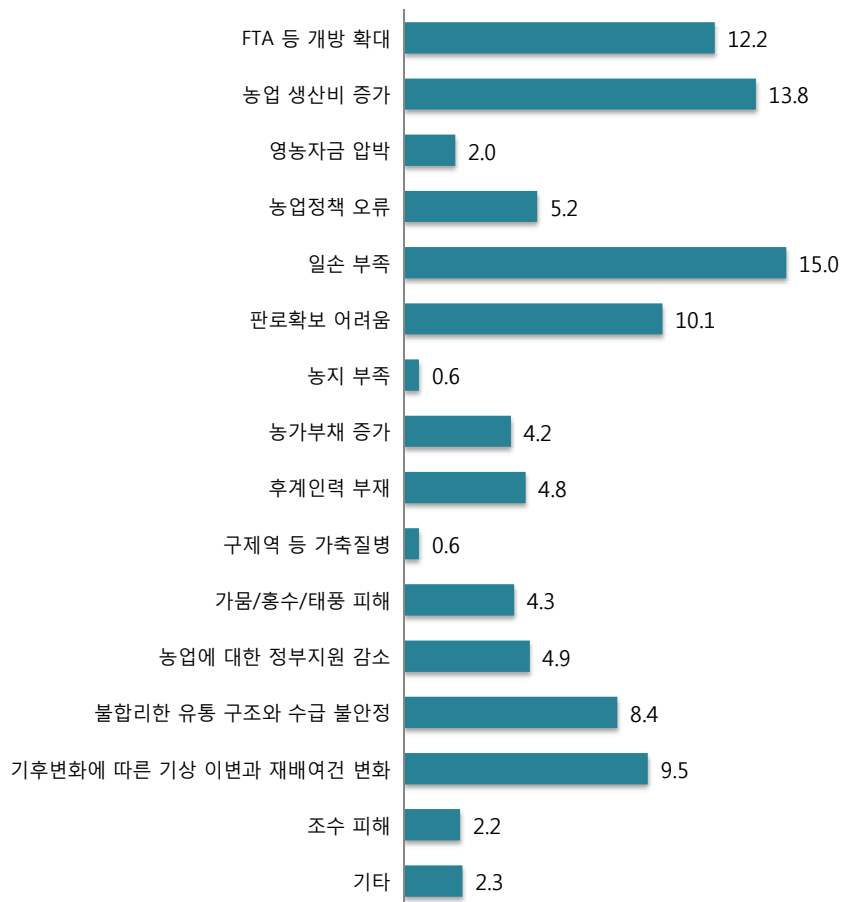
4.1. 농업경영 여건 변화와 향후 영농 의지

□ 농업경영 위협요소로 ‘일손 부족’ ‘생산비 증가’ 꼽아

-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소로 ‘일손 부족’을 가장 많이(15.0%) 꼽았음. 다음으로 ‘농업 생산비 증가’(13.8%), ‘FTA 등 개방 확대’(12.2%), ‘판로확보 어려움’(10.1%),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9.5%)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지난해 조사와 비교한 결과, ‘FTA 등 개방 확대’(17.6%→12.2%), ‘불합리한 유통 구조와 수급 불안정’(10.6%→8.4%)은 감소한 반면,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5.8%→9.5%), ‘일손 부족’(14.1%→15.0%)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농업 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인

단위: %



농가 77.4% “후계인력 없다”…영농규모 축소 의향 증가

□ 농업인 10명 중 4명 ‘영농규모 축소 계획’… 10년 전에 비해 13.4%p나 증가

- 향후 영농규모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묻은 질문에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41.2%)와 ‘축소할 계획이다’(40.8%)는 응답이 비등하게 나타났으며, ‘확대할 계획이다’는 응답은 8.7%에 불과함.
 - 인구특성별로는 ‘60세 미만’(17.8%), ‘대졸 이상’(17.1%), 경력 ‘20년 미만’(16.8%)의 비교적 젊은 계층에서 ‘확대할 계획이다’라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영농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견은 10년 전 조사결과 27.4%에 비해 13.4%p나 증가함.

표 12. 향후 농업경영 규모 변경 계획

단위: %

구분		사례수	확대할 계획이다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축소할 계획이다	수입개방 폭에 따라 조정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모름/ 무응답
전체		1,090	8.7	41.2	40.8	4.6	3.9	0.7
연령	60세 미만	382	17.8	41.9	29.8	6.3	3.7	0.5
	60세 이상	708	3.8	40.8	46.8	3.7	4.1	0.8
교육 수준별	고졸 이하	772	5.3	42.9	43.4	3.9	3.8	0.8
	대졸 이상	315	17.1	37.1	34.6	6.0	4.4	0.6
	무응답	3	0.0	33.3	33.3	33.3	0.0	0.0
영농 경력별	20년 미만	285	16.8	39.6	33.7	5.3	3.9	0.7
	20년 이상	804	5.8	41.8	43.3	4.4	4.0	0.7
	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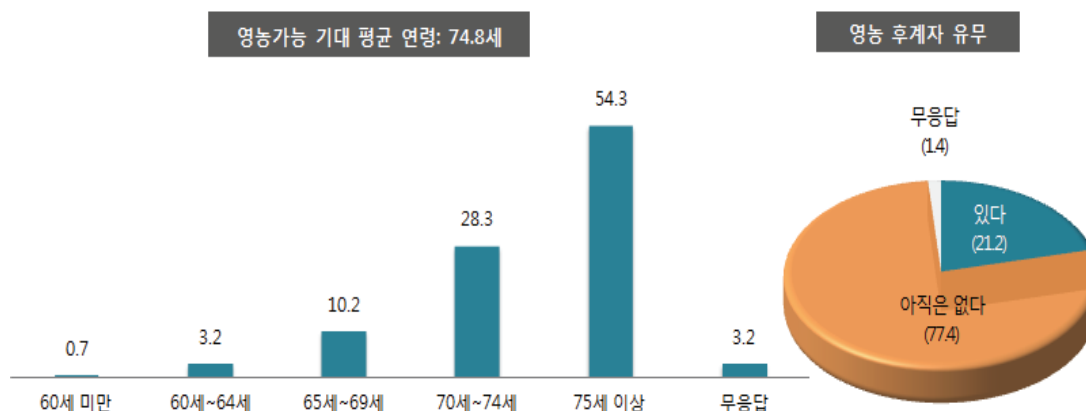
□ 영농활동 기대 연령 74.8세, 후계인력 없다 77.4%

- 영농활동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가능 기대 나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74.8세까지 영농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조사결과를 2014년과 비교하면, 영농활동 가능 기대 평균 나이는 거의 비슷한 편임. 한편, 75세 이상까지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54.3%로, 2014년 45.4%에 비해 8.9%p 증가함.
- 영농활동을 더 이상 못할 경우 후계인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다’는 응답이 77.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있다’는 응답은 21.2%로 나타남.
 - 인구특성별로는 영농경력 20년 이상, 수도권 농가에서 후계인력을 정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그림 9. 영농활동 가능 기대 연령과 후계인력 유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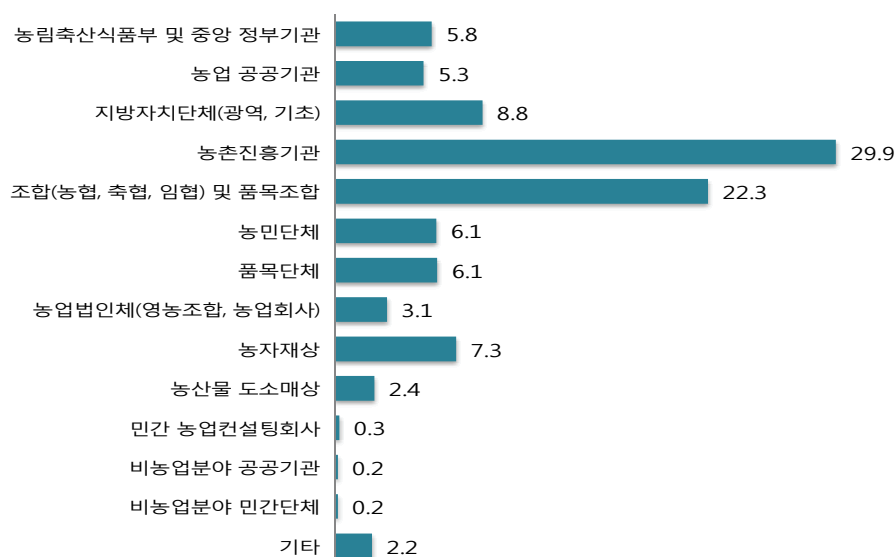
4.2. 영농활동 관련 조직 영향도와 의존도

□ 영농활동에 ‘농촌진흥기관’ 영향 가장 많이 받아

- 영농활동과 관련된 조직 및 단체의 영향도는 농업기술센터 등을 포함한 ‘농촌진흥기관’이 29.9%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은 ‘조합(농협, 축협, 임협) 및 품목조합’(22.3%),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8.8%), ‘농자재상’(7.3%)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이 밖에도 농업 관련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은 각 5.8%, 5.3%였고, 농민단체와 품목단체도 6.1% 수준으로 영향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 영농활동에 영향을 주는 조직 및 단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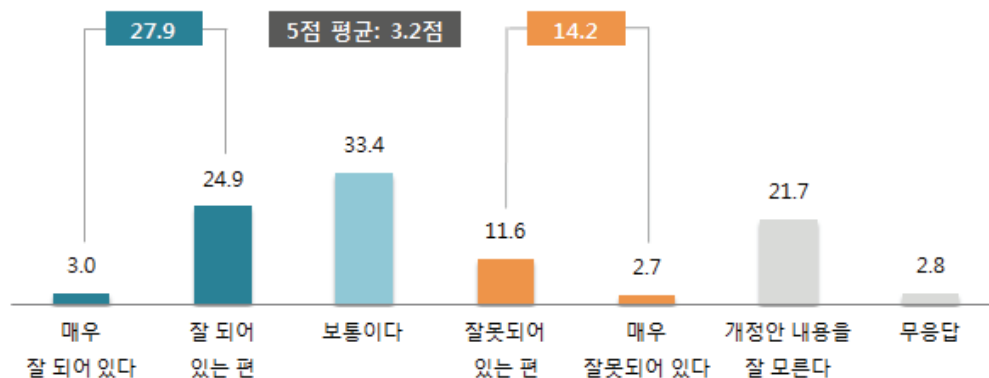
조합 의존도 높고, 농협법 개정에는 긍정평가가 우세

□ 농업인 절반 “조합(농축임협) 의존도 높다”…농협법 개정 긍정 평가

- 농업인 응답자의 절반가량(47.7%)이 조합(농축임협)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응답한 가운데, 농협법 개정에 대해서는 ‘잘 되어 있다’는 응답이 27.9%로 ‘잘못되어 있다’(14.2%)는 응답에 비해 13.7%p 높게 나타남. 한편, 응답자의 21.7%는 ‘개정안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응답함.
- 인구특성별로는 영농경력 20년 이상의 계층일수록 조합(농축임협)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60세 이상,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미만 계층에서 농협법 개정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평가 비중이 높게 나타남.

그림 11. 농협법 개정에 대한 평가

단위: %



4.3. 농업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인식

□ 농가 84.5% “일손 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 겪어”

- 최근 1년 사이 일손 부족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경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어려움을 겪은 편이다’(70.9%)라고 응답했으며, ‘농사에 큰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도 13.6%로 나타남.
- 영농 형태별로는 ‘특작’ 농가에서 ‘농사에 큰 차질을 입었다’는 응답이 25.0%로 가장 높았으며, 이 밖에도 과수와 노지채소 농가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됨.



표 13. 최근 1년간 일손 부족 어려움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농사에 큰 차질을 빚었다	어려움을 겪은 편이다	별 어려움이 없었다	모름/무응답
전체		1,090	13.6	70.9	14.2	1.3
영농 형태별	수도작	357	9.0	71.1	18.2	1.7
	과수	256	15.2	74.6	9.0	1.2
	노지채소	101	15.8	71.3	10.9	2.0
	축산	87	8.0	72.4	17.2	2.3
	시설원예	123	13.0	73.2	13.8	0.0
	특작	124	25.0	62.9	11.3	0.8
	기타	42	16.7	59.5	23.8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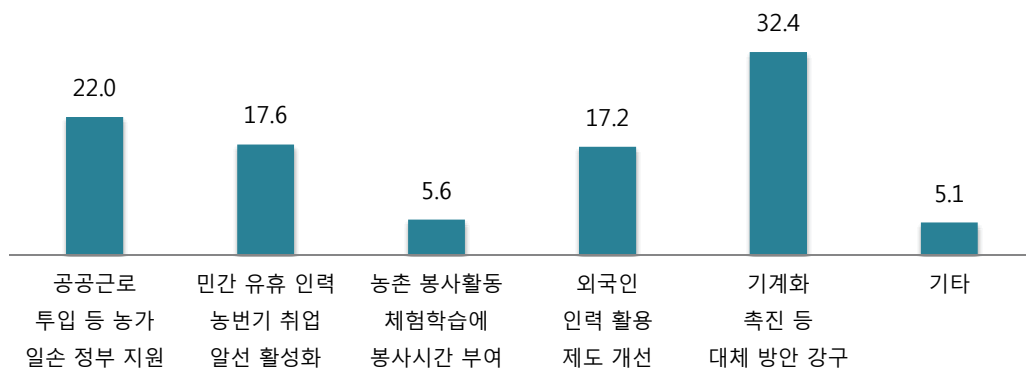
-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응답자(n=921)를 대상으로 이유를 살펴본 결과, ‘하루 일당(임금)이 너무 비싸서’(34.6%)와 ‘일손 자체를 구할 수 없어서’(32.0%)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가 노동력이 약화되어’가 18.5%로 나타남.
- 5년 전 대비 일손 부족 현상이 어떤지를 물어본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6.4%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응답함.

□ 일손 부족 해소 위해 ‘기계화 촉진’, ‘공공근로 투입’ 등 요구

-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방안으로는 ‘기계화 촉진 등 대체 방안 강구’라는 응답이 32.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공근로 투입 등 농가 일손 정부 지원’(22.0%), ‘민간 유희 인력 농번기 취업 알선 활성화’(17.6%), ‘외국인 인력 활용제도 개선’(17.2%)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인구특성별로는 ‘수도작’ 및 ‘축산’에 종사하는 농가에서 ‘기계화 촉진 등 대체 방안 강구’(각 40.9%, 44.8%)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2.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방안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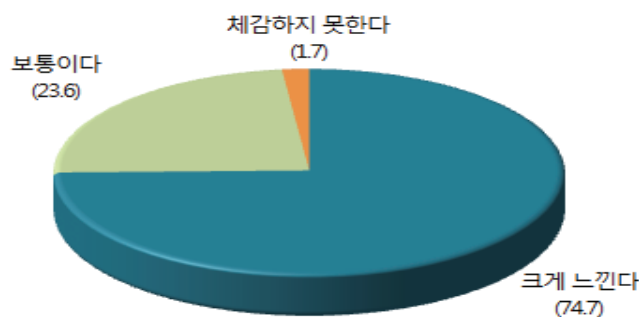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가 농사에 큰 영향 끼쳐”

□ 농업인 74.7% ‘기후변화가 농사에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

- 기후변화가 농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 농업인 10명 중 7명이 ‘크게 느낀다’(74.7%)고 응답함.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1.7%에 그쳤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23.6%로 조사됨.

그림 13. 기후변화가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인식

단위: %



- 최근의 기후변화 중 농업에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현상으로는 응답자의 절반이 ‘이상기온’(50.2%)이라고 답했으며, 이 밖에도 ‘가뭄’(24.6%), ‘병충해’(9.6%), ‘태풍’(8.3%)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영농형태별로 보면, 과수, 축산, 시설원에 농가에서 ‘이상기온’으로 피해를 받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음.

표 14. 기후변화 중 최근 농업에 피해를 받은 현상

단위: %

구분	사례수	이상기온	가뭄	홍수	태풍	병충해	기후변화로 피해가 없었다	모름/ 무응답
전체	1,090	50.2	24.6	1.7	8.3	9.6	2.7	3.0
영농 형태별	수도작	357	44.5	30.8	1.1	8.7	5.6	3.9
	과수	256	58.2	14.5	1.2	7.4	15.2	1.2
	노지채소	101	43.6	32.7	1.0	10.9	7.9	1.0
	축산	87	58.6	24.1	2.3	6.9	3.4	2.3
	시설원예	123	57.7	13.0	4.9	8.9	13.8	1.6
	특작	124	46.0	31.5	0.8	4.8	10.5	4.0
	기타	42	38.1	28.6	2.4	14.3	11.9	4.8

5. 요약 및 시사점

- 2016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농업·농촌의 역할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 도시민 과반수는 농업·농촌이 우리나라 미래성장 동력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으며, 농지 보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동의함. 다만,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에 동의하는 비율은 감소함.
 -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이 정체 상태이며,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부담 및 농촌 복지예산 증액 찬성비율은 지난해보다 감소하여 국민들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농업 관련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졌던 쌀 재고 문제와 대기업 농업참여, 농가 피해 완화 차원의 청탁금지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도시민의 견해 차이가 있음이 확인됨.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에 대해서는 농업인은 찬성 비율이, 도시민은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대기업 농업 진출도 전체적으로는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고 있지만 도시민의 경우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해(29.0%)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중장기 농업정책으로 도시민과 농업인은 ‘농가 소득안정’, ‘후계농업인 육성’, ‘유통구조 개선’을 공통적으로 꼽고 있어 향후 정책 수립에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수입 농산물에 도시민들의 대한 거부감이 줄고 있는 반면, 국산 농산물에 대한 구매 충성도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변화를 면밀히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이 개선되고 있고 거부감도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도 국산 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충성도는 여전히 30%대에 머무르고 있어 국산 농산물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 제고 대책이 필요함.
- 농업인들의 영농활동 기대 연령은 평균 74.8세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후계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일손 부족과 생산비 증가가 농업경영에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파악되었고, 기후변화가 농사에 영향을 끼친다는 비율도 70%를 넘었음.
 - 농가 84.5%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가운데, 영농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견이 10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13.4%p)하고 있어 영농후계자 육성과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됨.
 - 영농활동에 조합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농협법 개정은 긍정평가가 우세했지만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도 21.7%에 달해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이번 조사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농업인과 도시민의 기본적인 생각과 의식, 그리고 농업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와 정책요구가 파악되었음. 이 조사결과가 국민의 의식과 수요에 기초한 농업정책 연구 및 정책 수립에 활용되기를 기대함.



2016년

- 제13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138호 2016년 한·중, 한·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한석호)
- 제137호 농축산물 가격변화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분석(박미성, 윤선희, 김라이)
- 제136호 쌀 수급 동향 및 안정 방안(김태훈, 조남욱, 김종인, 우병준)
- 제135호 2016년 가구의 김장 수요와 채소 공급 전망
(김성우, 송성환, 노호영, 임효빈, 최선우, 한은수, 이형용, 노수정)
- 제134호 당류 저감 정책에 따른 과일산업의 대응과제(박미성, 신성철)
- 제133호 2016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림축산물의 소비·출하 및 가격 전망
(박미성, 이상민, 성명환, 우병준, 김태훈, 김성우, 장철수, 송미령)
- 제132호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 제131호 2016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정학균, 이혜진, 김창길)
- 제130호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김현중, 국승용)
- 제129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이용선, 이형우, 이미숙)
- 제128호 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
(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완, 정호연)
- 제127호 한·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26호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국승용, 최지현)
- 제125호 2016년 일본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 현황과 시사점(김종인)
- 제124호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허 장, 이윤정)
- 제123호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정도채, 성주인, 심재현)
- 제122호 곤충산업 실태와 육성정책 방향(김연중, 박영구)
- 제121호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 제120호 2016년 10대 농정 이슈(송미령, 김홍상, 박준기 등)

2015년

- 제11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118호 닭고기 수급 불균형과 파급 영향(우병준, 김형진)
- 제117호 2015년 김장철 채소류 수급 전망과 절임배추 소비특성 분석
(최병옥,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 제116호 쌀, 김치, 삼계탕 대중국 수출 검역협상 타결과 과제
(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 제115호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응전략(정학균, 김창길)
- 제114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
(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 제113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에 따른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 제112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11호 김치의 한·중 검역협상 동향과 수출 확대방안(최병옥, 노호영)
- 제110호 주요 농림축산물의 2015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
(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옥, 장철수, 최지현)
- 제109호 대한민국 성장의 대지, 농업·농촌 70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
(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 제108호 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07호 최근 소 값 동향과 전망(이형우, 우병준)
- 제106호 한·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 제105호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정은미)
- 제104호 할랄 농식품의 한·일 대응 실태와 과제(박기환)
- 제103호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현)
- 제102호 한·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 제101호 2015년 주요 농정이슈(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2014년

- 제100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99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 제98호 한·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 제97호 발농업의 쟁점과 발전방향(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 제96호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어명근, 이병훈)
- 제95호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박성재)
- 제94호 지역 간 연계협력 현황을 통해서 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과제(송미령, 권인혜)
- 제93호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김태훈, 송준호, 박동규)
- 제92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
(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 제90호 농어촌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박준기, 김미복)
- 제89호 한·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 제88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 정책 과제(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 제86호 한·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 제85호 한·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제84호 AI 발생 및 대응 상황과 방역정책 추진 방향(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2013년

- 제82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정정길)
- 제80호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 현황과 주요 과제(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 제79호 산지축산의 유럽 사례 및 시사점(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 제78호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 제77호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
(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 제76호 해외조림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 제75호 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박동규, 승준호)
- 제74호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석현덕, 박소희)
- 제73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송주호)
- 제72호 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제71호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석현덕, 안선진)
- 제70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3년 추석 가격 전망(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 제68호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정호근, 석현덕)
- 제67호 2013년 7월 북한의 수해 상황과 경제적 피해(권태진, 임수경)
-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박시현)
- 제65호 유기농업의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로드맵(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64호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군별 농업경쟁력 평가(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63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석현덕, 안선진)
- 제62호 한·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박준기)
- 제59호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성명환, 윤재웅)
-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정원호, 최경환)

KREI 농정포커스 제13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6. 12. 30.

발 행 인 김창길

편집위원 최지현, 우병준, 김수석, 김용렬, 한석호, 문한필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admin@han-d.co.kr

ISBN: 978-89-6013-940-4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